

---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2020. 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국예탁결제원

## 목 차

<b>I. 추진배경</b>	<b>1</b>
[참고1] 클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2
[참고2] 해외 주요국 현황	3
<b>II. 클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평가</b>	<b>4</b>
1. 그간의 성과	4
2. 한계점	5
<b>III.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b>	<b>6</b>
1.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7
2.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10
3.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13
4. 정책적 지원 확대	15
5.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18
<b>IV. 기대효과</b>	<b>20</b>
<b>V. 추진계획</b>	<b>21</b>
[첨부1] 클라우드펀딩 설문조사 결과	22
[첨부2] 클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23
[첨부3] 클라우드펀딩 제도개선 경과	24
[참고4] 클라우드펀딩 활용 사례	25

## I. 추진배경

-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16.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 참고 1, 2p)

- 제도도입 이후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직접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 ('17년) 280 → ('18년) 304 → ('19년) 370

\*\* '19년 공모실적(억원) : [소액공모] 594, [비상장 주식] 1,185, [중기 회사채] 2,250

-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이 일반투자자로 확대\*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 크라우드펀딩 성공자금을 바탕으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이 후속투자 유치, 고용확대 등의 성장단계에 진입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홍보, 우호세력(투자자·고객) 확보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

\* 252개 성공기업 대상 설문결과('19.12월), 홍보(57%), 후속투자 유치(52%) 기대 → 실제 992억원(110개사)의 후속투자 유치 및 인지도 제고 효과(☞ 첨부 1, 22p)

- 그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발행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

\*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추진 경과(☞ 첨부 3, 24p)

- 한편, 미·영 등 해외 주요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우리보다 폭넓게 운영\*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발행기업의 업력제한 없음, 높은 발행한도(미: 5백만\$ 예정, 영: 5백만 £) 등

➡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1. 크라우드펀딩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

-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되며, 증권형·대출형의 중개업\*이 금융업에 해당\*\*

\*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

### <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

※ 대출형(P2P)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시행 예정('20.8월)

\* 非금융업인 후원형·기부형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2.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및 P2P(대출형) 비교

□ (크라우드펀딩) “창업·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

\* 증권발행에 관한 각종 규제(증권신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등)를 완화

□ (P2P) 온라인으로 다수 자금공급자(투자자)의 투자자금을 모아 “자금차입자(개인·법인)”에게 중개업자(채권자)가 “연계 대출”

\* 투자자는 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받는 구조

⇒ 크라우드펀딩은 대출에 비해 엄격한 증권발행 규제 적용 및 투자기간이 장기 : 전세계적으로 P2P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

\* P2P/크라우드펀딩 : (한국) 약 22배 (미국) 약 45배 (영국) 약 20배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업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 1.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경과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등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자생적으로 발달
- '12년 미국의 JOBS법 제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후 각 국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

\* 시행 시기 : (영국) 14.4월, (한국) 16.1월, (미국) 16.5월

## 2.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 미국, 영국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실적은 도입 당시에 비해 3~4배 증가하여 우리보다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

(백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미국	-	-	28	86	86	130	330 (약 3,800억원)
영국	110	310	340	420	485	-	1,665 (약 19,300억원)
한국	-	-	15	24	26	32	97 (약 1,128억원)

\* 미국은 Reg. CF에 따른 발행실적, 영국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만 집계

※ 출처 : 美 Crowdfund Capital Advisors, 獨 Statista, 英 Cambridge Centre 등

## 3.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

- 공모규제를 완화\*한 점은 동일하나 주요국은 발행기업의 제한이 없고, 발행한도·투자한도도 대체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백만\$)	근거법	발행기업	발행한도	투자한도(일반투자자 기준)	
				연간 총투자	동일기업
미국	JOBS 법	제한없음	연 100만\$	연소득·순자산 중 적은금액의 5% (2천\$ ~ 5천\$)	-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FSMA)		연 500만 £	순투자가능 재산의 10%	-
한국	자본시장법	창업·벤처	연 15억원	1천만원	5백만원

- 미국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20.3월)

\* (발행) 100만\$ → 500만\$, (투자) 연소득·순자산 중 적은 금액의 5% → 큰 금액의 5%

## II.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평가

### 1 그간의 성과

#### ◆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

##### □ 낮은 발행비용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초기자금 공급

- 일반공모 및 소액공모에 비해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의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

	일반 공모	소액공모 <sup>1)</sup>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10억원 이상 <sup>2)</sup>	10억원 미만 <sup>2)</sup>	15억원 이하 <sup>3)</sup>
발행 조건	없음	없음	목표금액의 80% 이상 모집
발행 공시	증권신고서 등(27종)	소액공모서류(17종)	사업계획서 등(10종)
계속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제출	결산서류 게재
자료 게재	금감원 DART 시스템		펀딩 플랫폼
발행 실적('19년)	617건 175조원	63건 594억원	199건 370억원

1) 소액공모 제도를 30억원 이하(Tier 1) 및 30~100억원(Tier 2)으로 확대개편 추진 중  
 2)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 미제출 금액을 합산(개별건 기준 아님) 3) 신고서 제출여부 불문

##### □ 초기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통한 후속투자 및 성장을 지원

###### √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 ▶ 창업초기인 '16년 1차 펀딩(0.5억원), '18년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 ▶ 펀딩자금을 바탕으로 후속자금 유치(17.5억원), 수출시장 개척(중국), 매출액 증가('17년 1.9억 → '18년 11.2억)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

##### □ 대중(大衆)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고, 고객유치 등 홍보효과

###### √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 ▶ '16.7월부터 총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 ▶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 □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접근성 제고

###### √ 크라우드펀딩 벤처투자 성공사례

- ▶ '16.4월 A사는 크라우드펀딩으로 **0.9억원 주식 발행**(주당 모집가액 8,000원)
- ▶ '19.10월 A사 코스닥 상장(상장가 43,000원) ⇨ 3년만에 **주식가치 5.4배 상승**

## 2 한계점

◆ 엄격한 운용규제에 따라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

□ **(기업)** 발행기업의 ①업력 제한 및 ②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

① 업력 제한(7년 이내)에 따라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②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 **(투자자)** ①엄격한 투자한도, ②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한 측면

① P2P\*, 해외사례\*\*에 비해 투자한도를 엄격히 제한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 3,000만원

\*\* 우리나라는 동일기업·총투자 한도를 모두 규제, 미·영은 총투자 한도만 규제

② 경영·재무성과가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제한된 정보(사업계획, 재무자료)만으로 투자 판단

□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쳐, 펀딩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관리 등 적극적인 역할에 한계

□ **(인프라)** 정책금융 투자펀드(성장금융) 소진\* 등 클라우드 펀딩 관련 후속지원 인프라 부족

\* '16.3월 조성된 K-크라우드펀드(260억원)의 투자집행 완료 단계(소진율 82%)

○ 또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특성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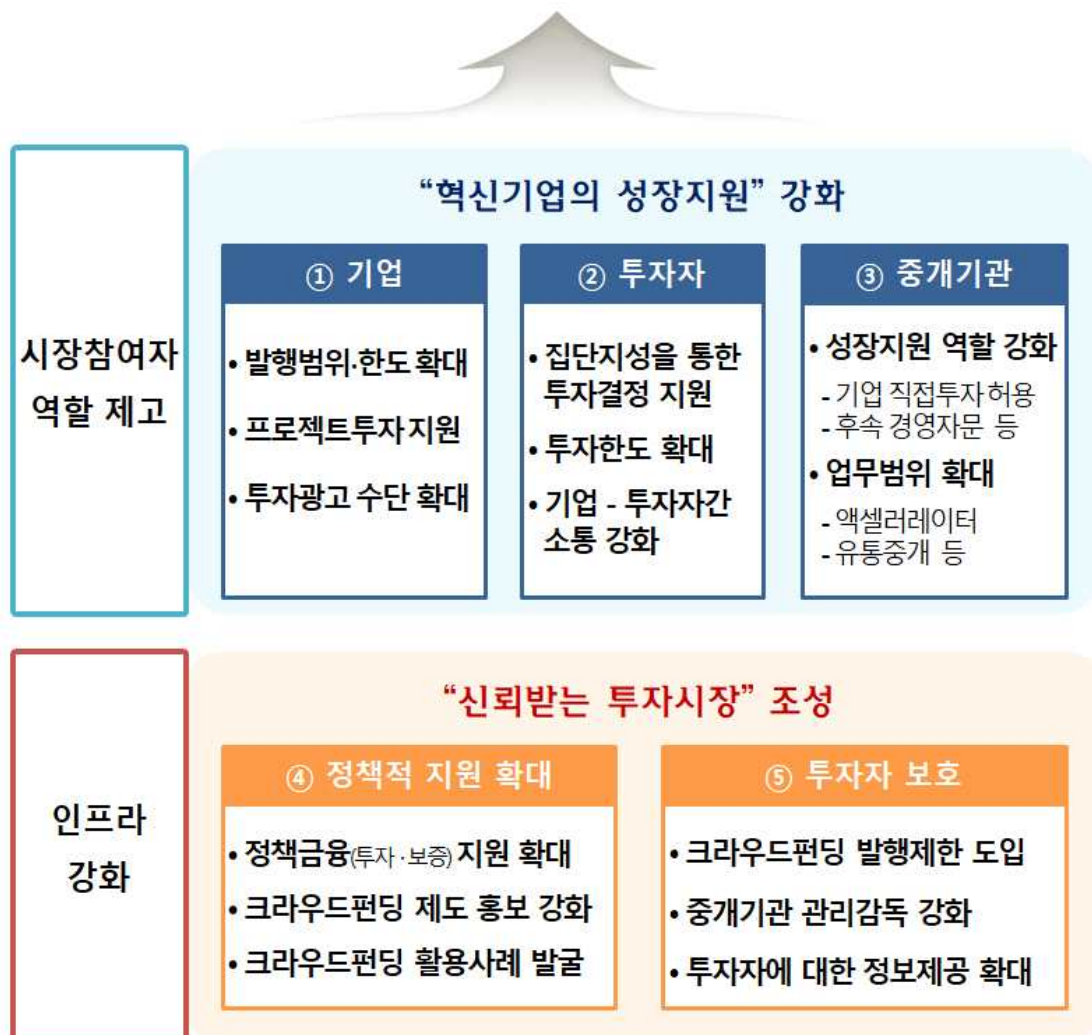
### III.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 기 본 방 향 >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 1) → 도약기(Phase 2) 이행 추진

-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 신뢰받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 인프라 강화

크라우드펀딩 제 2의 도약으로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추진전략 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1]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발행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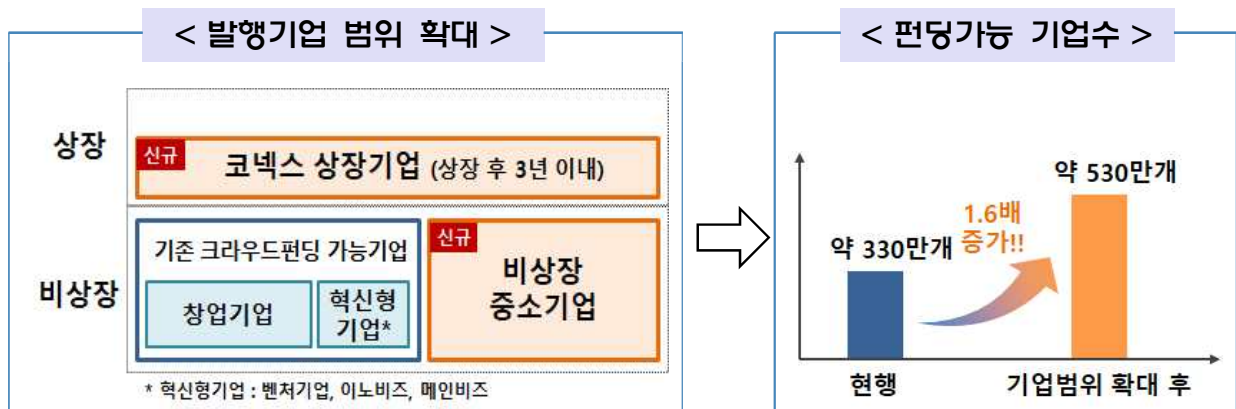
- **(현행)**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의 자금조달
  - 기업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시간, 자금규모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업력, 발행규모를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 활용에 제약
  - 미·영 등 주요국은 발행기업 업력 제한이 없고, 발행한도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 비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개선)**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 ①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中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공모발행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허용('20.4.2일 既시행)

- 단, 일반적인 공모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 발행기업을 "창업·벤처→중기"로 확대하는 자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완료('20.6.8일)



## ②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소액공모 제도개편시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만기 1년 이내 단기물이 대부분인 점 등 고려)

\* (예시)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시장법,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지원

### □ (현행)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

\* 프로젝트 투자 실적('16~'19년) : 총 39건(영화 30건, 공연 6건, 전시 3건)

#### < 프로젝트 투자 성공사례 >

✓ 영화 000('16년) : 영화 수입·배급 자금모집 → 6개월만에 41.2% 수익 실현

✓ 뮤지컬 00('17년) : 내한공연 제작자금 모집 → 연율 9.6%의 수익 배분

-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의 협소\* 등 활용에 제약

\*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R&D비용이 50%이상인 경우),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창업투자회사 관리규정 준용) ⇨ 프로젝트 투자 39건 모두 문화산업

### □ (개선) 대상사업·범위 확대, 연계투자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①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예시) 클라우드펀딩 발행업종 준용(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제외)

#### ②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용이하도록 지분제한 완화

\* (현행)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 70% 이상 → (개선안) 50% 이상

#### ③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원활한 자금모집 지원 ('21년 50억원 이상, 특허청)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②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3] 투자광고 수단 확대

- **(현행)** 광고수단을 “중개기관 플랫폼”으로 한정하여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유사사례\*\*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

\* 미국, 영국, 일본은 크라우드펀딩 광고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온투법상 P2P는 광고수단 제한없음(단, 방문·전화·이메일은 사전동의한 경우 가능)

- '17.10월부터 포털사이트에서의 단순광고\*를 허용하였으나, 발행기업의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 곤란(사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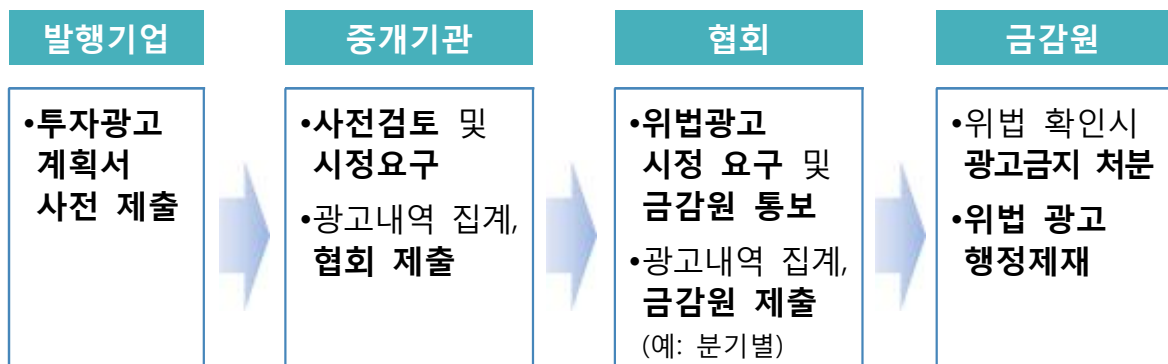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

◆ 크라우드펀딩外 증권발행의 경우 단순사실 광고\*(generic ad)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음(투자수요 환기를 위해 제한없이 허용, 자본법 시행령 §2 2.)

\* 발행기업 명칭, 발행 예정금액, 발행조건, 예상일정 등에 대한 광고

- 다만, 해당 광고는 중개 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
- 위법한 투자광고에 대해서는 중개기관·협회의 시정요구 및 금감원 통보, 광고금지 및 행정제재(과태료 등) 등 조치



☞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추진전략 ②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1] 집단지성을 활용한 투자결정 지원

□ **(현행)** 투자자는 중개기관이 선정한 기업·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결정

○ 중개기관의 펀딩 중개 과정에서 수요예측 및 반영이 어려움

\* 크라우드펀딩 실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차 펀딩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펀딩 성공시 추가적으로 2차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모집기간중 오프라인 기업설명(IR)을 금지하고 있어 발행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평가에 한계

□ **(개선)** 집단지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① **(온라인)** 펀딩 진행前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 도입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 금액 설정에만 활용(홍보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미국 SEC는 Testing-the-Water(투자의향점검)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진행 중

② **(오프라인)** 「오프라인 IR」 개최 허용.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 부과(협회 사전신고)

\* 정부, 정책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보육공간 등

\*\* IR의 정확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원기관, 중개기관 직원 등

- 협회는 사전에 준법사항을 지도\*하고, IR 내역을 취합·관리

\* 투자광고에 준하여 협회 자율규제(위법사실 금감원 통보, IR내역 집계 등)

☞ [조치 필요사항] ①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② 자본시장법 개정

## [2] 투자한도의 합리적 확대

- **(현행)** 투자손실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① 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② 총 투자금액을 제한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sup>1)</sup>	전문투자자 등 <sup>2)</sup>
① 동일기업 한도	500만원	1,000만원	한도 없음
② 총 투자한도	1,000만원	2,000만원	

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 5회이상 & 1,500만원이상 투자 등

2)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전문가,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등

- 해외사례, P2P 등과 비교시 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

< 일반투자자 >	미국	영국	P2P(온투법) <sup>2)</sup>
① 동일기업 한도	없음	없음	500만원
② 총 투자한도	연소득·순자산 <sup>1)</sup> 5% (2천\$ ~ 10만\$)	순자산 10%	3,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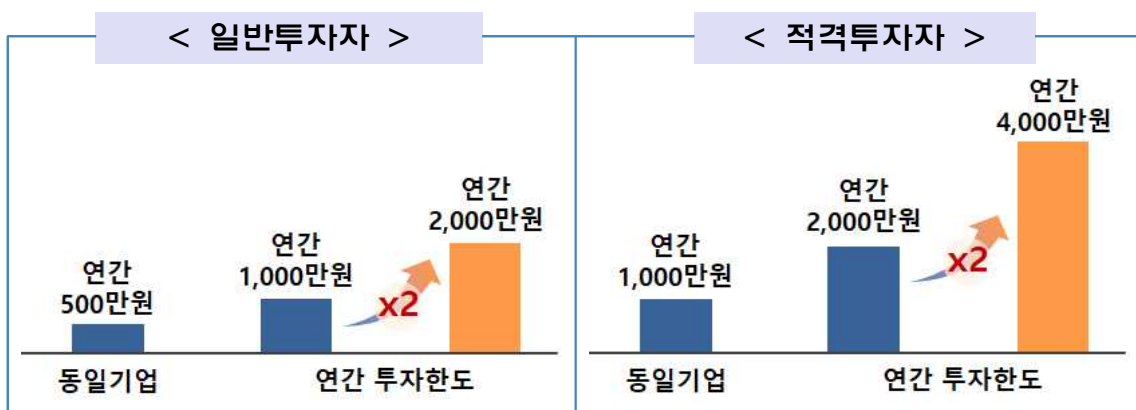
1) 미국은 투자한도 확대 계획(연소득·순자산 중 작은금액의 5% → 큰금액의 5%)

2) 적격투자자의 경우 ① 동일기업 한도 2,000만원, ② 총 투자한도 1억원

- **(개선)**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

- ① **(일반·적격투자자)**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 → 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 2천만원, 적격 4천만원)

-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② **(전문투자자)** 발행기업의 주주\*를 전문투자자에 포함

\* 현재 1차 펀딩시에만 전문투자자로 인정 → 2차 펀딩 및 그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주주(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제외)를 전문투자자로 인정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시장법 개정, ②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3]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투자자 소통 강화

#### □ (현행) 발행기업은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자(주주) 관리

- 그러나, 상장기업 등과 달리 투자이후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이 미흡한 측면
- 한편, 일부 기업은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 확보  
→ 후속투자 유치, 사업확장 등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

##### √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 ▶ (실적) 크라우드펀딩 3회 11억원 발행, 투자자수 884명
- ▶ (소통) 주요사항 공지(신제품 출시, 영업실적 등), 주주총회시 BBQ파티 개최 등
- ▶ (효과) 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약속된 배당금의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격려 & 지지

##### √ 한국판 불쇼이 발레학교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유치원

- ▶ (개요) 4회 8억원 발행, 투자자수 403명 \* 사모발행 포함시 9회 25억원
- ▶ (소통) SNS를 통해 현안 공지(3일~2주 주기), 중요사안은 개인메시지로 전달
- ▶ (효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펀딩 성공(공·사모 총 33억)

#### □ (개선) 발행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적 신뢰 구축을 지원

- ① 법상 공시의무(결산자료 등) 외 기업 현안 및 주요사항 공유 등 투자자 소통에 관한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마련
- ② 주주총회 개최시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면제\*, 소통행사 장소 제공 등 지원(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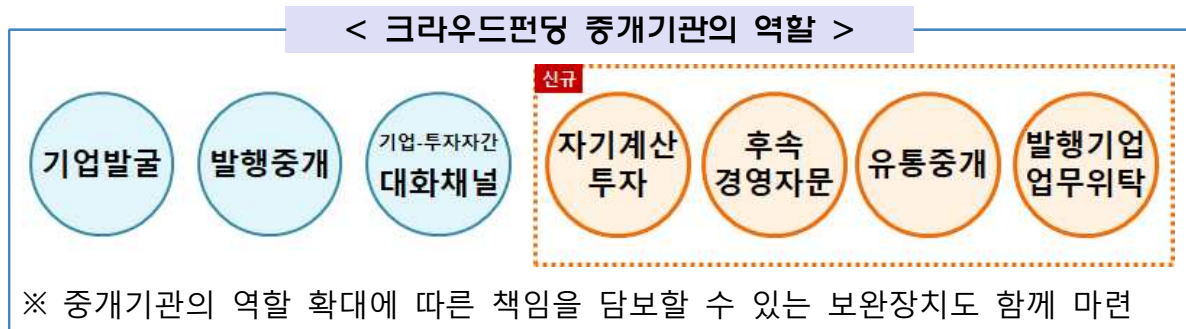
\* 펀딩성공기업(비상장기업)에 대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수수료 면제(~'22년말)

- ☞ [조치 필요사항] ① 가이드라인 마련(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예탁원)  
② 예탁결제원 내규 반영 등



## 추진전략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 ◆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1]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역할 강화

-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은 증권 발행의 단순 중개 역할
  - 펀딩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경영자문이 불가능하고, 증권사의 참여도 부족\*하여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은 제한적
  - \* 현재 15개 중개업자中 6개가 겸업사이지만 '19년중 중개실적은 5%(20억원)에 불과
- **(개선)**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
  - ①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
    - 단,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투자금액을 제한
      - ▶ **(투자대상)**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
      - ▶ **(투자금액)**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에서 투자
    - \* (예시)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투자 가능
  - 또한, 중개기관의 총투자금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법령으로 차단
  - \* ①투자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우선하여 회수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금지, ②발행기업·대주주에 준하여 1년간 전매제한

- ② 클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

\*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완료('20.6.8일)

- 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금지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①직접투자,  
②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

- ③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클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 → 개선(안) 20%)

※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용사 인가심사시 클라우드  
펀딩 실적을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추진

☞ [조치 필요사항] ①·② 자본시장법 개정, ③ 금융위 고시 개정

## [2] 클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현행) 중개기관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수익성  
확보가 곤란

□ (개선)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

- ① 다른 법률에서 정한 스타트업 지원업무(엑셀러레이터 등)를 펀딩  
중개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예시) 중개업자가 엑셀러레이팅한 기업에 대한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

- ② 발행기업의 공시, 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허용

- ③ 중개기관의 클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허용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해당 증권의  
주주 상호간 거래를 협의매매 방식으로 중개

\* 전매제한 기간(6개월, 발행기업·대주주는 1년)이 도과한 증권. 단, 일반·적격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미적용

- ④ 중개기관에 대한 중앙기록관리수수료 면제기간을 3년간 연장  
(당초 '21.1월말 → '24.1월말, 예탁결제원)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시장법 개정, ②·③ 중개기관 부수업무 신고



## 추진전략 ④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화·강화

### [1] 정책금융 지원 확대

□ **(현행)** 펀딩 성공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 연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수요 등에 비해 부족한 측면\*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결과('19.12월), 응답 기업의 86%가 펀딩 이후 후속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

□ **(개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정책금융 지원 체계 >				
	 Seedling·후속 투자	 연계 대출·투자	 Secondary(회수지원)	 IR 등 비금융 지원
현행	K-크라우드펀드 (260억원)	신·기보 보증대출 (19억원)	KSM 거래 (6건)	
개선	<b>확대</b> 펀드 신규조성 (200억원 + a)	<b>확대</b> 보증 확대(1,500억 ↑)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b>개선</b> KSM 거래 활성화 등	<b>신규</b> 산은 Next Round 등 (크라우드펀딩 세션)

① **(투자)**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를 조성(성장금융)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 '16.3월 출시된 K-크라우드펀드(260억원 규모, 성장금융 출자)는 212억원 집행 완료 →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178억원(62건) 투자(주목적투자 비율 84%)

⇒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예탁원, '20.下)하고, 향후 펀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 추진

⇒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19.7월 既조성), 지역벤처 투자펀드(예탁원·지자체, 신규조성)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57.5억원 조성('20.5월말까지 23억원(8건) 투자)

**② (연계 대출·투자) 편당 성공기업에 대한 연계 대출·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신보, 기보, 기은)

⇒ 기 조성된 상품 활용 및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 편당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

구분	규모	대출은행	보증기관
IBK희망편당대출 <sup>1)</sup>	<b>1,000억원</b>	기업은행	신보, 기보
신보 특화보증 <sup>2)</sup>	<b>500억원</b>	모든 은행	신보

- 1) 기존에 조성되었던 1,000억원 지원상품이 19억원 집행에 그침('20.5월말) → 지원 대상 확대(업력 5년 이내 → 업력제한 폐지), 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적극 지원
- 2) '17년~'20.3월말 약 400억원 기집행 → 향후 5년간 500억원 신규지원 계획

⇒ 신·기보 보증기업이 **클라우드펀딩에 도전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직접투자(보증연계투자)도 추진**

**③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및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 확충**(거래소, 코스콤)

\* 스타트업 전용시장으로 '16.11월 개설되었으나 거래 미미(등록 70개社, 거래 6건) → 편당기업의 KSM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중개기관 연계 홍보·마케팅 등 추진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으로 '20.4월 개설

- 신규 조성될 K-클라우드펀드를 **소액 개인지분**(일반·적격투자자) **인수목적으로도 활용**(성장금융)

**④ (IR 등) 편당 성공기업을 위한 IR 특별세션 신설**(산은, 신보, 기은) 및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예탁원)

	예시
IR 프로그램	산업은행 클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신용보증기금 U-CONNECT series 클라우드펀딩 기업은행 투자설명회 with 클라우드펀딩 등
기타	예탁결제원 부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또한, 창업·벤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명부관리 수수료 **인하 혜택**(최초 5년간 70% 인하\*)을 **지속 제공**(예탁결제원)

\* 70% 인하 : 수수료 연 126만원 → 70% 면제 후 37.8만원(△88.2만원)

## [2]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홍보 확대

-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기업·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결과('19.12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응답 기업의 48%)

- **(개선)** 크라우드펀딩 홍보관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 ① **(홍보관)**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Front 1」에 크라우드펀딩 제도 홍보관 마련('20.6월 완공 예정)

\* 약 200개 스타트업 입주, 정책금융기관·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 중심지

- ② **(설명회 등)** 크라우드펀딩협의회\* 주관으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설명회 개최('19년 42회 → '20년 온라인비대면 교육 등 진행)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 (개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
- (구성) 중개기관 및 펀딩 성공기업 / (간사기관) 예탁결제원
- (역할) 업계 자율협의체로서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 [3]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사례 발굴

-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 발굴

< 활용사례 예시(☞ 첨부 4, 25p) > \* 업계 협의 등을 거쳐 '20.하반기중 추진

### ①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IP 프로젝트 투자

- 중소기업이 신탁한 IP의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IP신탁 수익증권 발행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개를 통해 투자자 확보

### ②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

- 국내외 중개기관 및 예탁결제원 협약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보다 간편하게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경로를 마련

## 추진전략 ⑥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 [1] 크라우드펀딩 발행제한 규제 강화

- **(현행)** 중개기관은 발행기업의 범죄이력을 확인·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발행을 금지하지 않음
  - 미국은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 과거 10년 이내 증권발행·거래 등 관련 유죄선고(사기·기망, 시세조종 등)

\*\* 발행기업 및 발행기업의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자 등

- **(개선)**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 강화(위반시 기업·중개기관 벌칙 신설)

\* 온라인 발행의 특성상 증권사기 등의 우려에 더욱 취약한 점 등을 고려

☞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2]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 **(현행)**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 컨설팅 위주로 감독
  - 앞으로 직접투자, 경영자문 등 중개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개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할 필요

- **(개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① 등록유지 요건\*을 위반한 중개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 6개월내 위반사항 미해소시 등록취소

\* 최저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위반, 6개월 이상 영업 미영위 등

②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발행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금감원)

\*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의사항(발행한도 확인, 결산서류 게재의무 등) 및 위반시 제재수준, 기타 위반사례 등

③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 유의사례 배포 및 설명회(금감원)  
③ 중개기관 모니터링·감독 강화(금감원)

### [3]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현행) 발행기업은 법상 연 1회 결산자료 공시의무만을 부담

- 증권발행 이후에는 기업의 경영 현황 및 합병, 영업 양수도, 폐업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적시에 알기 어려운 문제

\* 발행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자율적인 정보제공 및 소통 유도과 함께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체계화할 필요

□ (개선)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

①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 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

② 발행기업의 경영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 개편(예탁원)

\* (예시) 기업별 기본정보(대표자, 업종, 본사 등), 증권발행 현황 및 경영실적(결산자료, 종업원수 추이, 후속투자 유치 등 시계열 자료) 등을 제공

- ☞ [조치 필요사항] ①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협회)  
② 크라우드넷 개편(예탁원)

## IV. 기대효과

- ① 클라우드펀딩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21~'25년) 빠르게 성장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 발행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시뮬레이션 결과('20.5월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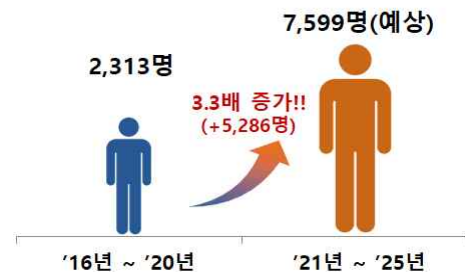
\* 제도개선이 '20년중 마무리되고, '21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발행가능 기업수 확대,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에 관한 과거 경험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5년간('21년~'25년) 효과 추정

- ① 연간 발행기업수가 '19년 195개 → '25년 500개 이상으로 증가
- ② 연간 발행규모가 '19년 367억원 → '25년 1,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 ③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명('16~'20년간 평균) → 약 1,500명 이상('21~'25년간 평균)으로 확대

<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추정) >



<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



- ② 클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성장경로로 자리매김
- ③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엔젤투자 활성화
- ④ 클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기관으로 역할 강화

## V.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3분기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3분기중 입법예고)

추진과제	조치 필요사항 및 담당 기관	추진 일정
<b>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b>		
① 클라우드펀딩 발행기업·발행한도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20.3Q~
②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지원	자본법 시행령 개정 펀드 조성(특허청)	'20.3Q~ '21.1Q~
③ 투자광고 수단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20.3Q~
<b>②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b>		
①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인프라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협회)	'20.3Q~ '20.3Q
② 투자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	'20.3Q~
③ 기업의 투자자 소통 강화	클라우드펀딩협회의(예탁원)	'20.3Q
<b>③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b>		
① 클라우드펀딩 기업 성장지원 역할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20.3Q~
②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부수업무 신고(중개업체) 등	'20.3Q
<b>④ 클라우드펀딩 인프라 확충</b>		
①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	'20.3Q
② 클라우드펀딩 제도 홍보 확대	예탁결제원	'20.3Q~
③ 클라우드펀딩 활용사례 발굴	금융위·원, 예탁원 등	'20.3Q~
<b>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b>		
① 발행제한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20.3Q~
②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20.3Q~
③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예탁결제원	'20.3Q~



## 첨부 1

## 클라우드펀딩 설문조사 결과('19년말)

◆ [설문조사 개요]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252개사) 및 중개업자(14개사)를 대상으로 '19.12월 2주간(12.9~12.26) 펀딩성과 등 조사(예탁원) ※ 중복응답

### 1 클라우드펀딩 도전사유 및 효과

- ①홍보효과(57%)를 기대하고 펀딩에 도전한 기업이 많았으며, 조달자금은 ②운영자금(69%)·연구개발(54%)에 주로 사용
- 펀딩 성공효과로는 ③적시 자금조달(75점), 인지도 제고(70점)를 꼽았고, ④대다수 기업(69%)이 추가펀딩 계획이 있다고 응답

응답 비중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펀딩사유	홍보효과(57%)	후속투자 유치(52%)	대안적 조달(35%)
② 자금용도	운영자금(69%)	연구개발(54%)	신규인력채용(29%)
③ 성공효과	적시 자금조달(75점)	인지도 제고(70점)	정부사업 유리(54점)
④ 추가펀딩	계획 있음(69%)	없음(31%, 사유: 주주관리 어려움, 절차복잡)	

### 2 클라우드펀딩 성공에 따른 성과

- (자금유치 등) 후속투자 유치 992억원\*(110개사, 중복 포함), 정책자금 201억원(55개사), 해외수출 90억원(36개사) 등 달성

\* 벤처캐피탈 594억(33사), 엔젤투자 131억(31사), 기관 98억(23사)

- (일자리 창출) 펀딩 성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18년말 대비 605명 증가했으며, 고용증가율은 22.8%에 달함

\*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도 '18년말 대비 77명 고용 증가(증가율 33.0%)

※ [참고] '18년 5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2%(통계청)

### 3 클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건의사항

- 펀딩기업 후속지원(86%), 소득공제 등 투자자혜택 확대(56%), 클라우드펀딩 홍보(48%), 수수료부담 완화(6%) 등



## 첨부 2

## 클라우드펀딩 시장 현황('19년말 기준)

### ① (총괄) '16.1월 도입이후 4년간 총 1,128억원 발행(성공률\* 59%)

\* 목표금액의 80%이상 청약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클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성공률은 상승 추세('16년 46% → '19년 64%)

(개, 건수, 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b>발행기업</b> (발행건수)	<b>110</b> (115)	<b>170</b> (183)	<b>178</b> (185)	<b>193</b> (199)	<b>585</b> (682)
<b>발행금액</b>	<b>174</b>	<b>280</b>	<b>303</b>	<b>370</b>	<b>1128</b>
<b>평균 발행금액</b>	<b>1.6</b>	<b>1.6</b>	<b>1.7</b>	<b>1.9</b>	<b>1.9</b>

\* '20.1~5월 : (발행기업) 65개사 (발행건수) 65건 (발행금액) 101억원

### ② (기업) 4년간 총 585개 기업(682건)이 펀딩에 성공(평균 1.9억원)

\* 585개 기업중 2회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53개, 최대 펀딩횟수 6회

#### ○ 정보통신·제조업이 전체 발행금액의 68.0%

(억원)	정보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	문화
<b>발행건수</b>	246	222	97	47
<b>발행금액</b>	395	372	160	84

#### ○ 3억 이내 성공기업이 전체 발행금액의 55.4%

(억원)	1억 이하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억~15억
<b>발행건수</b>	359	232	75	29	3
<b>발행금액</b>	209	416	298	200	36

### ③ (투자자) 총 5.7만명의 투자자가 평균 196만원 투자

#### ○ 일반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수의 93%, 금액의 57% 차지

구 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합계
<b>투자인원(명)</b>	53,081	2,737	1,423	57,241
<b>투자금액(억원)</b>	643	81	404	1,128
<b>평균 투자금액(만원)</b>	121	297	2,828	196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최근 2년간 클라우드펀딩 5회이상 & 1,500만원이상 투자 등

### ④ (중개업자) 15개 중개업자(전업 9개사, 겸업 6개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전업사의 중개가 대부분(950억원, 85%)

## 첨부 3

##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경과

◆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②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①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부동산·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펀딩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코넥스 상장후 3년간 펀딩 허용\*\*

\* (기존) 음식점, 이미용업 등 펀딩 불가 → (개선) 업종 불문 허용('19.1월)

\*\* (기존) 상장기업의 펀딩 불가 → (개선) 코넥스 상장후 3년간 허용('20.4월)

- 연간 모집금액을 7억원 → 15억원으로 확대('19.1월)

- 연간 투자한도를 2배 확대\*('18.4월)하고, 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19.1월)

\* (일반) 동일기업 200만원, 총 500만원 → 동일기업 500만원, 총 1,000만원

(적격) 동일기업 500만원, 총 1,000만원 → 동일기업 1,000만원, 총 2,000만원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 1,500만원 이상 투자

### ②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19.1월)

\*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위험 이해도를 평가하는 온라인 테스트

- 신중한 투자결정을 위해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10일)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19.1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③ 세제지원, 벤처투자 인정 등 크라우드펀딩 저변 확대

- (세제지원) 당초 업력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지분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 적용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을 업력 7년이내 기업으로 확대('18.2월, 조특세법)

- (벤처투자 인정) 크라우드펀딩(지분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벤처기업 인증에 필요한 벤처투자자로 인정('20.5월, 벤특법)

## 첨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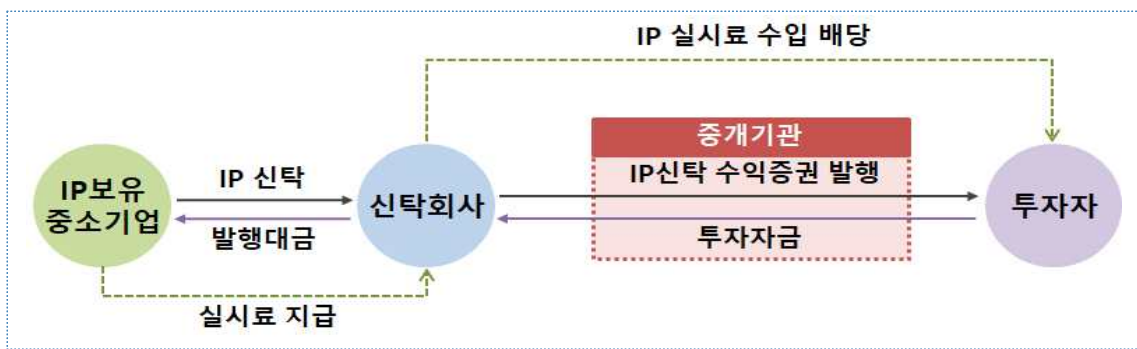
## 크라우드펀딩 활용 사례(예시)

### 1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IP 프로젝트 투자

- ▶ (기본구조) ① IP 보유기업(중소기업)이 신탁한 IP의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 →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이 수익증권의 발행을 중개하여 투자자 확보

- ▶ (기대효과) 중소기업은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 가능

※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 수익증권의 발행 중개 등에 대한 특례 필요



### 2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 ▶ (기본구조) ① 예탁원 및 국내외 중개기관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관심을 보이는 국내기업의 IR 자료를 제공(예탁원) → ② 해외 중개기관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간편하게 국내 기업에 투자

※ SPV를 활용한 사모방식으로 우선 운영 → 활성화 상황에 따라 공모 운영

- ▶ (기대효과) 간편한 투자경로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

